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건강보험 5인 이상 미신고사업장 2만여 개소 편입조치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난 2월 일제 확인조사 결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당연 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기피해온 5인 이상 미신고사업장이 약 2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에 대해 공단은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19,449개 사업장 159,657명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대부분의 미신고사업장을 가입시키는 성과를 거두어 서민가계 안정과 오는 7월 시행될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건강보험 확대적용 여건을 조성하였음.
- 금번에 가입신고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변호·세무·법무·병의원 등 고소득 전문직종 또한 1천여 개소에 달했음.
- 자진신고기간내 가입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부과 등이 면제되나 신고기간내 공단이 가입 독려 및 행정처분조치 등을 안내했음에도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고 있는 120여 개 미신고 사업장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에 따라 6월초부터 공단에서 검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임.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理事長 朴泰榮)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수렴하기 위하여,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6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해 전화로 실시한 조사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 보험수가의 인하에 대해서 10명중 9명 가량인 85.7%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재 건강보험 수가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수진자 조회제도에 대해서는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실시하는 것에 찬성한다'(93.6%)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의사와 환자간에 불신을 조장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6.2%에 불과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진자 조회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 현재 종이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로 바꾸는 것에 대해 전체의 64.0%가 찬성하였음
- 보험료의 인상요인이 되는 보험혜택 확대에 대하여 67.7%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보험료 부담이 늘더라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31.7%로 적지 않았음.
- 소액진료비 전액본인부담제에 대해서는 43.4%가 찬성하였으며, 찬성한 국민들의 대다수(80.4%)는 이 제도를 동네의원으로 확대하는 것에도 찬성하였음.
-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고지원을 30%정도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60.0%)이 찬성하였음.
- 국고 이 외의 추가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술, 담배, 휘발유 등 건강 위해제품에 대해 일정 비율의 건강세나 부담금을 부과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54.3%)하는 응답이 '반대한다'(44.4%)는 응답보다 다소 많았음.
- 고가약제 상한범위 조정에 대해서 전체의 61.1%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음.
- 진료비 본인부담 수준에 대해서 54.3%의 응답자가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비싸다'고 응답한 비율도 34.7%로 비교적 높았으며, '싸다'고 응답한 비율은 10.5%임.
- 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정안정을 기하면서 보험혜택수준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64.4%의 응답자들이 '혜택을 높이지 않아도 좋으니 보험료를 인상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현재 보험료에 의한 부담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음('보험료를 다소 인상해서 혜택도

늘리고 재정도 안정시켜야 한다'는 비율은 34.5%임).

-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부담을 늘려야 한다면 본인부담금과 보험료 중 어느 것을 인상하여야 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40.3%)과 '보험료 인상' (44.5%)이라는 두 의견이 팽팽한 대립을 보였음.
- 수용 가능한 보험료를 인상범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의 70.7%가 10%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6.4%는 10~15% 미만이라고 응답해 가능한 낮은 범위에서 인상이 이루어 지기를 원하고 있었음.

2000년도 고액 및 노인진료비 증가

- 2000년도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는 전체 의료비 중 6.5%를 차지함.
 - 2000년도 입원 요양급여비용 중 21.5%를 고액진료비가 차지함.
 - 입원진료 고액진료비 중 종합병원급 이상이 92.3%를 차지함.
 - 청구건당 고액진료비 평균 830만원으로 집계됨.
 - 6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 고액진료비 지출 중 45.2%를 차지함.
- 노인 의료비 1995년 대비 3.1배 증가함.
 - 2000년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7.1%, 2010년에는 10%를 차지할 전망이다.
 - 2000년도 65세 이상 노인 전체 의료비는 1995년에 비교하여 3.1배 증가한 2조 2893억원, 공단부담금은 3.2배 증가한 1조 6068억원으로 집계됨.
 - 2000년도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가운데 입원진료에서는 노인성 백내장이 59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래진료에서는 본태성 고혈압이 1205억원으로 가장 많았음.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시범사업기관 선정결과 발표

보건복지부는 올해 실시하는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시범사업기관으로 74개 신청기관 중 성공회유지재단, 부천시오정구노인회관,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동해시 노인복지회관, 윤경재단의 5개소를 선정·발표하였다. 선정된 시범사업기관은 사전 오리엔테이션, 기본업무교육 및 모

범자활 후견기관 견학을 마친 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한다. 선정기관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성공회유지재단 대학로교회는 대도시형으로 주요사업계획은 닭농장, 버섯재배, 나무나라공방, 숲기행, 역사기행 모임 등임.
- 환경재단은 대도시형으로 주요사업계획은 자격증 취득과 연계한 용역사업(조리사, 발관리사, 운전 등), 간병인 파견, 출장행사팀 운영, 무공해제품(콩나물, 비누) 판매 등임.
- 부천시 오정구 노인복지회관은 중소도시형으로 주요사업계획은 종합용역서비스(경비, 주유, 주차관리), 간병인파견사업, 열린 공부방 등임.
-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은 농어촌형으로 주요사업은 청정유기농작물 재배 및 판매, 세차, 어르신봉사팀(어린이 안전, 청소년 보호, 꽃가꾸기 등)임.
- 동해시 노인복지회관은 농어촌형으로 주요사업은 한과제조 및 판매사업, 그물 수선작업 등임.

저소득층 자활창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자활사업시행 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자활후견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자활사업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87개소를 선정하였다.

- 자활후견기관의 선정은 2001년 1월 13일~2월 3일까지 총 308개소를 접수하여 1차 서류심사에 총 200개소가 통과되었으며, 이들 통과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면접 및 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87개소를 선정, 금년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 자활후견기관의 선정은 지역별로는 서울 17개소, 경기 12개소, 전북 10개소 등을 포함하여 총 16개 시·도에 87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기관특성별로 보면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법인 44개소, 종교관련 기관이 12개소, 실업관련 단체 12개소, 시민노동단체 12개소, 기타가 7개소임.
- 자활후견기관은 저소득층의 자활의욕·직업능력 향상 및 안정적 고용 기회 확보를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이들에게 집중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보건복지부는 70개소의 종교단체·시민단체·사회복지관 등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 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자활후견기관의 주요사업으로는 자활공동체 조직·운영지원 등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공동작업장 운영 등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취업알선,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등이 있음.

저소득노인을 위한 무료간병서비스 확대 제공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 활동이 어려우면서도 집안 형편상 수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간병인을 올 하반기 3,000여 명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무료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약 95,000명으로 이는 유료간병인을 이용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 노인이나 자녀·배우자의 수발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을 제외한 것임. 이에 반해 자활사업, 공공근로 등으로 공급되고 있는 무료간병인력은 줄잡아 1,300명에 불과한 실정임.
- 간병인이 없는 저소득 노인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히 많은데, 상당수의 병원은 간병인이 없는 환자를 아예 입원시키지 않고 있음.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수발하는 데 묶여 있으며, 간병인이 없어 제 때 수발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지병은 물론 욕창, 고독 등과 싸워야 함.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병인으로 일하게 될 사람들은 주로 일할 능력이 있는 여성실직자들'이라고 밝히고, 이들이 무료간병인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저소득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저소득 환자가정에 대한 간병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